

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8. 27.

행정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: 2020. 8. 14. /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8. 19.

다. 상정일자: 2020. 8. 26.

(제254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)

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기획재정국장

나. 제안이유

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대상(안 제2조부터 제4조)

나.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(안 제5조부터 제7조)

다.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와 운영(안 제8조부터 제13조)

라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, 별첨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0. 7. 9. ~ 7. 2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,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15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,

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

-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대상을 명시하였으며,

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

- 필수업종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,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

-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운영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,

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

- 중앙행정기관, 타 지자체,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-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전환이나 휴업이 가능한 업무도 있는 반면, 의료·돌봄·안전·운송 등은 위기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해당 노동자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
- 이에, 본 제정안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난발생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, 선언적·선제적 대응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다만, 재난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할 수 있어 조례상 필수업종의 범위, 필수노동자 지원내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,
- 필수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, 권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,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